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61

북한행정 연구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최영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61

북한행정 연구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인 쇄 2022년 11월 7일

발 행 2022년 11월 9일

지은이 최영준

펴낸곳 경남대학교 출판부

주 소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전 화 02-3700-0700

팩 스 02-3700-0707

인쇄처 웃고문화사(02-2267-3956)

정 가 비매품

ISBN 978-89-8421-553-5(9330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행정 연구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차례

I. 서론	1
II. 선행연구 검토	7
1. 북한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	9
2. 한국행정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	13
3. 북한행정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	20
4. 선행연구 검토 결과	21
III. 연구 방법	23
1. 자료 수집	25
2. 자료 분석	28
IV. 분석 결과	33
1. 연구실적 분포	35
2. 행정학 영역별 연구내용 개관	38
3. 연구실적 추이	44
4. 연구방법론 분석	49
5. 논문출처 분석	55
V. 북한행정 연구 평가	67
1. 북한행정 연구의 문제점	69
2. 행정학자들의 북한행정 연구참여 부진 사유	75
VI. 북한행정 연구 발전방안 제언	79
1. 자료공개의 확대	81
2. 행정학계의 참여 증진	83
3. 학제적 연구교류 플랫폼 창설 및 운영	84

I

서론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패전 후 전범국가로서 분할 통치의 대가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유럽 전장과 달리 아시아의 전장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도 연합국의 승리를 위해 군사적 노력까지 기울였던 우리나라가 분단되었다. 동서 냉전 구조의 부상과 강화가 한반도에 가져온 역사적 부정의의 대표적 사례다. 이후 한반도는 남북 정부의 수립, 한국전쟁, 대화와 교류, 갈등과 대결의 교차 등 과정을 겪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에게 복잡하고 모순된 존재로 남아 있다. 헌법에서 상징적으로 보이듯 북한은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이고,¹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²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엄연한 UN의 개별 회원국이다. 남북 간 상호 비국가성으로 인해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조항은 적용 되지 않는다. 남북 간 합의를 규율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로 남북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³ 법적 제도적 모호성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결합하면서 남남갈등이란 모습으로 나타난다. 북한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태도

-
1.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는 분절적이고 상충적이며,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도 포용과 상호주의를 오가고 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던 북한은 동유럽의 몰락과 김일성 사망 및 고난의 행군시대를 넘어 이제는 김정은 집권 10년이 지났고 공세적인 핵교리를 법제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비극적인 역사의 유산이 법과 제도에 투영되었고,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사실과 이정보다 이념과 감정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마저 일관성을 잃고 있다. 그 와중에 한반도 정세는 악화되고 있다.

궤도난마식의 해법은 없다. 이럴수록 숙명의 존재인 북한을 객관적으로 속속들이 파악하고 지식을 축적하며, 그 지식을 공유하여 인식과 태도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대북정책이 합리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독립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란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북한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적 성격을 띠고 또 그래야 한다. 각 학문 영역별로 해당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그 분야뿐 아니라 전체로서 북한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이 긴요하다. 학문 간 분업과 협업의 조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만큼 그에 기반한 대북 인식과 정책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국가의 활동영역이 넓고 그 농도도 짙다. 다시 말해

우리를 포함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 어느 나라보다 공적 영역이 훨씬 광범위하고 그 영향력도 크다 할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정치현상에 대한 연구 외에도 북한의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행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분야에서도 북한행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부형욱, 2011; 안지호·조충희 외, 2018; 최진욱, 2002). 만약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북한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고 전체로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전술했듯, 북한의 체제 성격과 정책 강조점에 조응하면서 각 학문 분야별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때만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북한행정 연구가 그 필요성을 충족시킬만큼 충분히 또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려 한다. 그간 북한행정과 관련하여 어떤 분야에서 어떤 주제가 연구되었나? 연구성과는 충분한가? 연구는 추세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는 어떤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는 어떤 학문분야가 주도하는가? 학제적 소통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행정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추적을 통해 그간의 북한행정 연구현황을 밝히고, 그를 기초로 하여 향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데 있다. 어느 학문 분야이든 일정 시점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평가하는 것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문적 작업이고 북한행정 연구에 대한 정리 및 평가는 그 예가 매우 희소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에 기반하여 구축된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북한행정 연구현황에 대해 평가한다. 끝으로 북한행정 연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II.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초점이 ‘북한’의 ‘행정’에 대한 ‘연구현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의 설계와 진행에 학문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행 연구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북한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 행정학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북한행정 연구동향 연구가 그것이다.

1. 북한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

김영수(2006)는 세계적 냉전이 반영된 한반도내 체제대결 분위기에서 시작된 북한연구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제기된 ‘북한 바로알기 운동’으로 동력을 받고 1990년대 초반부터 객관적 학문연구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북한연구의 기원과 배경 및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2006년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은 북한연구의 대부분이 북한정치 연구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비정치학 영역, 비사회과학적 영역의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북한학(North Koreanology)란 용어를 붙일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어지는 북한연구 현황분석에서는 당시까지 북한을 연구 주제로 쓴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파악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은 총 235편이었으며, 1970년대 8편, 1980년대 17편, 1990년대 101편, 그리고 2000년대는 2005년까지만의 실적이었음에도 109편으로 대폭 증가되는 추세를 밝혔다. 주제별 분류에

따르면 정치 93편(39.6%), 경제 20편(8.5%), 법 17편(7.2%), 행정 17편(7.2%), 교육 14편(6.0%), 문학9편 (3.8%), 예술 8편(3.4%)순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석사학위논문은 2,675편으로 상당수였고, 이 또한 시간경과와 함께 증가세를 보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도 박사학위논문과는 다른 분포양상을 보였는데, 정치(30.6%), 행정(13.6%), 경제(11.1%), 교육(6.9%), 예술(4.2%) 순서였다. 김영수는 이에 대해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에서 북한관련 논문을 생산하고 있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끝으로 연구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로 진입하는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안득기와 허정필(2013)의 연구가 있다. 안득기와 허정필도 연구대상은 북한관련 박사학위논문으로 정했고, 다만 2012년까지로 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논문 수도 613편으로 증가하였다. 학위논문 숫자의 추이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주제도 분석하였는데, 경제(83편), 정치(58편), 대외(57편), 탈북자(45편), 체제(40편)이 상위 5위안에 위치하였다. 이는 정치 93편(39.6%), 경제 20편(8.5%) 순으로 압도적으로 정치 우위였던 김영수의 연구결과와 다른 점인데, 차이의 원인은 서로 상이한 주제분류틀을 활용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의 경우 최소 9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분류한 데 비해 안득기와 허정필은 29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김영수의 틀이라면 정치에 해당되었을 연구가 안득기와 허정필의 연구에서는 다른 주제 분야, 예를 들면 체제나 사상, 안보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김영수의 연구에서 2005년까지 이미 93편이던 정치분야 논문 수가 2012년

까지의 학위논문을 포함한 안득기와 허정필의 연구에서는 58편으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정을 주제로 한 연구는 9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역시 김영수의 연구에서 17편이었던 데 비해 줄어든 수치이며, 이유는 위에서 추론한 바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주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는데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하였다. 상위 5개 대학은 경남대(49편), 동국대(46편), 고려대(45편), 서울대(43편), 경희대(28편) 였는데 특히 상위 3개 대학은 공통적으로 당시 북한학 전공 학과 및 학과목이 개설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한편 필자들은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통사적 입장에서 시기별로 초기 전체주의적 접근방식에서 1980년대 내재적 접근방법을 거쳐 미시적 접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연구대상인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실제 어떤 연구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고유환(2015)의 연구를 주목해 보려 한다. 그도 분단 이후 70여년간의 북한 연구경향을 연구세대별로 정리하면서, 북한 연구가 이데올로기적 존재 구속성을 벗어나 객관적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어서 우선 2014년까지의 북한관련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에 대한 계량분석을 제시한다. 김영수, 안득기와 허정필의 연구와 분석대상이 같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총 논문 수의 증가(742편)와는 증가추세도 같다. 분류기준인 연구 주제도 안득기와 허정필의 29개에서 언론이 추가된 30개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주제별 순위도 경제, 정치, 대외, 탈북자 순으로 큰 차이는 없다. 행정을 주제로 한 논문수도 9편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상기연구들과 다르게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관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북한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제시한 점이 차별적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3년간 10개 학술지에 1,59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주제별로는 사회문화(25.1%), 정치(19.7%), 외교(19.2%), 경제(14.1%), 통일(11.9%), 기타(9.7%) 순이었다. 논문게재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북한연구학회보, 통일정책연구, 통일문제연구, 현대북한연구, 북한학연구 순서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고유환도 북한연구가 전체적으로 전체주의 접근법, 비교정치 방법론, 내재적 접근과 비교사회주의방법 등 기존의 방법과 함께 일상생활연구방법, 도시사 연구방법, 문화인류학적 접근 등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다양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실제 어떤 방법론이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끝으로 명재진과 이한태(2015)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북한관련 연구 전반-학술지, 석·박사 논문, 그리고 단행본-400건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류를 행하였다. 이 연구가 상기 연구들과 구분되는 점은 이들이 북한관련 논문을 선정할 때 북한학이 학제적 분야이며 그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KISS(한국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특정 학술지들을 한정하는 대신에 다양한 학술지를 포괄하는 KISS에 북한정치, 북한외교, 북한경제 북한군사, 북한사회, 북한문화, 북한인권이란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이 기간중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관련 논문 총 137편 가운데, 경제(34편), 군사(32편), 사회문화(28), 인권(22편), 정치외교(21편) 순서로 해당 주제가 연구되었다. 주제별로 많이 다루어진 분야의 순서가 고유환의

연구결과와 순서가 다른 이유는 전자가 북한 전문분야 학술지 10개로 모집단의 범위를 한정된 데 비해 후자는 모든 학술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후자는 특히 단일 키워드를 활용함으로써 검색 대상이 대폭 줄어든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북한학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사실확인과 함께 이론적,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위논문 연구에서 보듯 북한 행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학술지 연구에서는 해당카테고리가 없어 아직 정확히 그 상대적 비중을 알 수 없다. 둘째, 연구 주제 등 연구실적에 대한 실증적, 계량적 분석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분야별 순서가 달라지는 등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은 가급적 객관적으로 정하되, 전후 연구와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연구분야처럼 학제적이고 따라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구대상 선정시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연구에 기여하는 그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학교별 설명 외에- 아직 실증적 분석이 수행된 적이 없다. 넷째, 북한 연구의 방법론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설명과 평가는 있으나, 실제 논문들을 대상으로 활용된 방법론을 파악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한국행정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

행정학분야에서는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권경득(1996)은 1967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행

정학보에 기고된 논문 541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경향을 고찰하였다. 북한에 대한 연구동향연구가 연구주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들을 분류한데 비해 행정학 연구경향 연구는 행정학의 연구영역별로 연구성과들을 분류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권경득은 한국행정학회의 행정학 문헌분류체계에 따라 행정학 연구영역을 행정이론, 행정학방법론,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 및 기획, 행정관리, 지방·도시행정, 분야별 정책·행정의 9개로 분류하고, 30년간의 연구실적들이 행정이론, 지방·도시행정, 분야별 정책·행정, 정책 및 기획, 조직론, 재무행정, 인사행정의 순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였다. 아울러 연구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행정학 연구방법을 서술적 접근, 통계적 접근, 모의실험·수학적 모델 등 3가지로 나누고 논문 541편이 어느 방법론을 사용했는지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서술적 접근이 381건(70.4%)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통계적 접근 154건(28.5%)이 두 번째였으며, 모의실험·수학적 모델은 6건(1.1%)로 가장 활용도가 낮았다. 한편, 분야별 행정·정책 연구의 카테고리에서 수행된 연구내용 파악을 위해 권경득은 9개 분야를 제시하였다. 연구실적이 많은 순으로 정리하면, 사회·복지·노동, 국토개발·환경, 경제, 과학기술, 교육·문화, 국방·치안, 외교·국토통일, 교통·통신, 기타 분야였다. 권경득의 연구 이후로 거의 모든 연구가 연구영역과 연구방법론을 행정학 연구 경향의 핵심 분석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상현(2002)은 권경득의 연구를 이어 1995년부터 2001년간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45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상현은 권경득이 제시하였던 행정학 연구

영역 9개 중 가장 빈도가 낮았던 행정학 방법론을 제외하고 8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방 및 도시행정, 정책 및 기획, 조직론, 인사행정, 행정이론, 재무행정 순으로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는 권경득의 연구와 좀 달라진 결과인데 주상현은 시대가 변하면서 학자들의 관심 분야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그는 개념적·서술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연구방법 경향도 분석하였는데, 질적 연구(47.4%), 양적 연구(43.7%), 개념적·서술적 연구(18.8%) 순으로 활용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권경득의 연구보다 주상현의 연구가 후대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것이므로 양적 분석기법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론되는데, 연구방법론에 대한 개념규정과 분류가 서로 달라 직접적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최영출과 박수정(2011)의 연구는 위 연구들과는 달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행정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최영출과 박수정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수록된 논문 총 296편의 초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앞의 두 연구가 연구대상 논문들이 행정학의 어떤 연구영역에 분포하는지, 연구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였다면, 이 연구는 논문의 초록에 나타나는 키워드를 조사하고 4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핵심 주제로 정의한 다음, 핵심 주제어 사이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핵심 주제어 사이의 네트워크 지도를 도출하고, 다시 단어에 연결된 링크수를 기준으로 정리함으로써 복수의 클러스터로 표시하여, 핵심 주제어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였다. 최영출과 박수정은 이를 통해 거버넌스가 행정학의 핵심적인

연구로 부상하였고, 이는 지방정부라는 단어와 강한 연계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이는 네트워크 분석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채원호(2013)는 한국행정학보와 행정논총, 그리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등 3개 학술지에 실린 비교행정 및 국제행정 주제를 다룬 총 261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 연구경향은 1995년까지는 북미와 유럽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일본,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연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논문수가 압도적이고 개도국을 연구하는 사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북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외국을 연구하는 경우에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두었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채원호는 정책, 통치구조·레짐·거버넌스, 도시·지방, 행정개혁, 조직·인사, 재무·예산·공기업, 이론 및 방법론 순으로 연구 빈도를 정리하였다. 가장 연구가 활발하였던 정책영역의 분야는 교육·노동·인력·보건·복지, 경제·조세·산업·통상·에너지, 통일·외교·국방·치안·지방자치, 환경·교통·도시·지역개발, 정보통신·과학기술, 기타(문화, 언어 등)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윤영진(2013)은 서울행정학회지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총 89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도 연구영역과 접근방법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다만, 영역분류를 서울행정학회에서 논의된 별도 분류체계를 따랐고 이는 권경득과 주상현의 연구에서보다 훨씬 늘어난 16개였다. 조직, 인사, 재무, 정책, 지방행정, 비교/국제행정, 공공서비스, NGO, 문화, 복지,

환경, 전자정부, 규제, 행정윤리, 행정개혁, 행정사가 그것인데 앞부분의 전통적 행정학 영역은 거의 같고 뒷부분은 행정학의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의 연구주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정책, 지방행정, 조직, 인사, 재무분야 순으로 연구실적이 많았다. 정책분야를 세분한 연구영역의 구분도 제시했는데 환경·에너지, 보건·복지, 정부구성 및 운용, 정보·IT, 문화·종교, 산업·경제 순이었다. 운영진도 연구방법에 의한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것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두 가지였고, 후자에 문헌분석, 사례연구, 비교연구, 면담조사, 역사적 연구, 법제도적 연구 등을 포함시켰다. 전술한 16개 연구영역별로 분류된 논문들의 연구방법을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질적분석이 양적분석보다 많이 채택, 활용되었으나, 조직, 인사, 공공서비스, 행정윤리, 문화 분야에서는 양적분석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정준금(2013)의 논문은 오직 정책분야를 다룬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고찰한 연구들과 다르다. 한국사회와 행정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 150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기에, 조직, 인사, 재무 등 행정학 연구영역별로 분류를 하지 않았다. 대신 정책논문에 집중하여 위의 다른 연구들이 제기하지 않았던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은 누가 연구를 수행하였나는 질문이다. 정책학도 학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자가 소속된 학문분야에 관심을 두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저자의 전공이 행정학이고, 타 학문 전공자가 기고한 사례는 경영학 전공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오직 1편뿐이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는 연구목적이라는 기준을 추가하였다. 정책학

은 전통적으로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추구하고, 전자를 통상 경험적·실증적 연구, 후자를 규범적·처방적 연구로 구분하기에 논문 작성의 목적 및 의도를 기준으로 연구논문을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정준금은 실증과 처방 두 가지 목적 외에도 이론화를 위한 시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 논문을 실증, 처방, 및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증이 48.7%, 처방이 44.7%, 이론이 6.6%로 분류되었다. 끝으로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질적분석, 양적분석, 사례분석, 비교분석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질적분석이 44%, 사례분석이 26.7%, 양적분석이 22%, 비교분석이 7.3%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해영과 최성락(2014)은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92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행정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대상 논문들을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로 이분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전자는 조직, 인사, 재무 등 전통적 행정학의 범주에 드는 연구이고, 후자는 정책분야에 집중한 연구였다. 이해영과 최성락은 행정학 논문에 대해서는 행정학 영역별로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윤영진과 같은 16개 영역기준을 활용하였다. 정책학 논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준금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의 구도 하에 분석을 하였는데, 그들에 의하면 44.81%가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즉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을 다루는 처방적 연구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정책학 논문이 다른 정책분야의 구분과 관련하여 문화, 복지, 정보, 교육, 지역발전, 환경, 규제, 농업 등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행정학 연구경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북한 연구동향에 대한 논문들에 비해 분석틀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그것은 북한 연구가 북한이라는 행위주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개념인데 비해, 행정학은 사회과학 가운데 학제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긴 하지만 학문대상이 행정이라는 사회현상이고, 학문의 정체성도 보다 분명하며 따라서 학문의 경계에 대한 동의기반이 더 넓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경향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은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은 모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활용하였으며, 키워드 연결망을 활용한 최영출과 박수정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대상 논문들에 대한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경향 파악을 위해 행정학의 연구영역을 세분한 분석틀을 활용하였고, 그들은 전통적 행정학 분야와 정책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각 영역에 대한 구체내용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연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연구방법론을 주요한 경향파악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자마다 사용한 분류기준은 달랐다. 셋째, 특히 정책 논문에 대해서는 정책학의 역할, 사명과 관련하여 처방과 실증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넷째, 행정학의 학제적 성격에서 착안하여 학문별 기여도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끝으로 북한 관련 연구는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비교행정의 연구경향 연구에서도 연구실적 기록이 거론되지 않는 등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3. 북한행정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북한행정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는 극히 희소하다. 정길호(2013)는 한국행정학회가 2007년 북한사회·행정연구회를 2011년에는 통일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관련 연구실적과 연구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학관련 연구조직의 연구실적도 서술하고 있다. 다만, 연구성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아니고 총론적 차원에서 논문명과 편수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 도출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이대웅, 이다솔, 그리고 김춘순(2022)의 연구는 거의 유일한 북한행정 연구동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이다. 우선 저자들은 북한 행정 연구의 학문적 개방성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서 검색, 발굴하였다. 검색어로 ‘북한+행정’, ‘북한+정책’, ‘북한+조직’, ‘북한+인사’, ‘북한+예산’, ‘북한+지방’을 입력하여 총 479건의 논문을 수집했다. 그리고 주로 각 논문의 초록에 제시된 키워드를 활용하여 핵심 주제어 탐색 및 핵심 주제어 간의 연결망을 도출함으로써 중점 연구개념간 연결관계를 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행정 연구의 전체적 현황과 특정기간별 특징을 설명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전술한 최영출과 박수정의 연구가 채택, 사용하였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과 동일한 기법이였다. 이들의 연구는 다수의 논문분석을 통해 연구의 핵심주제 및 관련성 그리고 그것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큰 그

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다학문적 성격이 짙은 행정학의 경우 연구성과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착안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연구대상인 북한행정 관련 논문의 내용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이나 정책분야 등 논문을 분류하는 기준이 없고, 접근방법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행정 연구현황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4. 선행연구 검토 결과

북한학 연구동향 연구에서는 행정분야 연구가 희소했고 행정학 연구경향 고찰에서는 북한이 보이지 않았다. 북한행정 연구에 대한 분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행정을 연구한 논문들이 행정학 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분석이 적절하다. 아울러 각 연구성과에 활용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시기별 구분을 통해 동태적 변화 여부도 감지해 낼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행정’의 ‘학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분석대상 선정단계에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논문 저자의 소속과 출처를 통해 관련된 학문분야와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III

연구 방법



Ⅲ. 연구 방법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방법을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1. 자료 수집

북한행정 연구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간 북한행정에 대한 연구실적을 확보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선행연구들이 자료 확보를 위해 주목한 대상은 석·박사학위논문이나 전문학회지 게재 논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학회지 게재 논문을 택하였다. 우선 석사논문 중에는 물론 우수 논문도 있지만, 아직은 독립적인 성과로서의 학문적 성숙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외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은 북한 연구 논문에 대한 고찰에서 이미 보였듯 행정분야에 대한 논문 수가 너무 적어 의미있는 분석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며, 많은 경우 학위취득 이후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택하지 않았다.⁴ 전문 학술지를 출처로 하는 경우에도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다시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특정한 기간동안 단수나 복수의 특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학문분야에 대한 제한없이 자료를 제공하는 학술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라는

4. 이대웅·이다솔 외(2022)도 이런 이유에서 박사학위논문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행정’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개방성을 감안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대상을 수집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KCI를 활용하였다.

‘검색어로서는 이대웅·이다솔 외 등이 사용하였던 여섯 개(‘북한+행정’, ‘북한+정책’, ‘북한+조직’, ‘북한+인사’, ‘북한+예산’, ‘북한+지방’)외에 북한 행정을 연구한 실적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섯 가지를 더 추가하였다. ‘북한 당·정·군’, ‘북한 노동당’, ‘북한 헌법’, ‘북한 관료’, ‘북한 간부’, ‘북한 재정’이 그들이다. 우선 ‘북한 당·정·군’과 ‘북한 노동당’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 군간의 관계가 체제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여겨져 왔기에, 두 개념을 매개로 북한 행정 관련 연구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검색어로 활용하였다. 둘째, ‘북한 헌법’은 북한이 당 우위체제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최고 규범은 헌법이기 때문에 권력구조와 운영의 측면에서 북한 행정관련 연구성과가 추가로 발굴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용하였다. 셋째, ‘북한 관료’는 우리 측에서는 조직론이나 인사행정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북측에서도 주로 ‘관료주의’ 등 병폐를 거론할 때 활용되긴 하지만 북한 행정관련 연구성과를 추가로 검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검색어로 추가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사’나 ‘예산’ 등 우리측에서는 익숙하고 또 주제와 직관적으로 연결되나, 북한에서는 ‘간부’와 ‘재정’이 대체 용어로 사용되거나 병행하여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 간부’와 ‘북한 재정’을 검색어로서 추가하였다. 검색의 시간범위에 있어 시작점은 제한하지 않았고⁵ 2022년

8월말까지 KCI에 게재되어 논문들을 대상으로 검색을 진행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검색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인 북한행정 연구의 자료로서 적합성을 가진 것인지 검토를 하였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검색된 논문이 ‘북한’과 ‘행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냐 하는 것이었다. 먼저, ‘행정’이라도 ‘북한’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없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특정 방식의 통일을 전제로 하고 통일 후 특정 국정분야 혹은 조직의 통합을 다루지만 현재 북한의 해당 분야에 대한 실증적 설명이나 분석이 전혀 없는 연구가 꽤 있었다. 이런 논문은 본 연구가 파악하려는 북한의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다만,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미래 준비라는 차원에서 탐색적이고 개척적이며 또 실질적으로도 효용이 있는 그러한 연구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 통합문제를 다루면서 과거 및 현재의 북한 행정현상을 고찰한 논문은 당연히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많은 연구가 우리 사회의 탈북자 정착지원정책을 다루었는데, 모두 북한정책이 아닌 우리 정부의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이 논문들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북한’에 대한 연구지만 ‘행정’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학문의 성과로 판단되는 논문도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북한행정에 대한 연구현황에 대한 연구라는 전제에서 외국 연구자의 논문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필자

5. 이대웅·이다솔 외(2022)은 시간적 연구범위를 200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다.

의 주관이 개입되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즉, 1단계에서는 제목으로 명백히 채택 여부가 갈리는 수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2단계에서는 초록을 읽고 선택 여부를 정했으며, 3단계에서는 수집 여부 결정이 어려운 논문들을 대상으로 본문을 참조하면서 최종 판단하였다. 그리고 후술 하듯 각 논문들이 사용한 연구방법론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대상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최소 4번 이상 자료로서 자격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총 826편의 북한행정 연구 논문을 수집하였다.

2.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전체 수집된 대상 논문들이 행정학의 견지에서 어느 분야를 다루었는지, 둘째는 추세분석으로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연구실적이 변해왔는지, 셋째는 어떤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주체와 관련하여 어떤 학문분야가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영역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학 연구영역 구분들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보았듯, 대부분의 연구가 행정이론,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 및 기획, 행정관리, 지방·도시행정, 분야별 정책·행정을 공동적으로 포함하면서 비교/국제행정, 공공서비스, NGO, 문화, 복지, 환경, 전자정부 등의 포함여부에 따라 적게는 8개 많게는 1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분류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윤영진, 2013: 13) 본 연구에

서는 행정환경,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그리고 정책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틀로 삼았다.⁶ 행정학 경향연구에서는 행정이론의 세부구성 요소로 보통 행정철학 및 행정윤리, 접근방법, 행정사, 행정문화 그리고 정치경제 등을 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체 행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나 배경 그리고 역사적 측면을 다루는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영역이라고 보고 행정환경이라는 카테고리로 설정하였다.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였다. 다만, 정책 및 기획의 경우 뒤에 정책이라는 분류영역이 따로 있어 통합하였고, 비교/국제행정, 공공서비스, NGO, 전자정부 등의 분류항목은 우리나라 행정학에서도 비교적 새로이 부상하는 분야라 북한 행정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제외하였다. 문화, 복지, 환경 등 분야는 정책 분야로 통합하여 고찰하였다. 끝으로 정책 카테고리 자체를 정책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추가적 문제가 남았는데, 전술했듯 선행연구들도 이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상의 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 분류 및 선행연구들의 분류표를 참조하고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분류틀을 작성,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대내정책과 대외 및 대남정책으로 소분류를 하고 대내정책 분야에 경제, 산업(농수축, 관광, 정보화, 상업 및 유통 포함), 국토(토지, 주택, 도시 포함), 과학기술, 노동, 복지·보건의료(식량 배급 포함), 방재·산림, 치안·체제유지·통제, 문화·체육, 교육, 종교, 보훈, 여성·청소년, 그리고 환경 분야를 배치하였다. 대외

6. 어느 범주로도 구분이 어려운 논문은 기타로 분리했으나, 후술하듯 1건 밖에 없었다.

및 대남정책 범주안에는 외교, 핵, 통상·특구, 군사·안보, 그리고 대남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총괄적 정책기조·복수 정책에 관련된 복합분야·개발원조 등 따로 분류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이렇게 수집되고 분류된 연구대상 논문들에 대해 5년을 기점으로 끊어서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연구실적이 변해왔는지 추세분석을 하였다. 기간 구분은 현재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정했다.⁷

이어서 각 논문에 적용된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듯 합의되고 단일한 연구방법의 분류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량과 비계량으로 이원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우선 이 기준에 의해 연구대상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계량, 비계량 구분하에서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텍스트 마이닝, 통계분석, 계량모델링 등이 전자에 문헌분석, 면접, 사례분석 등이 후자에 해당하였다. 연구방법을 확인하고 분류하기 위해 대부분 논문의 연구방법편과 연구결과 분석편 및 참고문헌까지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논문의 학문영역별 구분 등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음은 이미 기술한 바

7. 이에 대해서도 합의된 기간 기준은 없다. 매년 연구실적 변화를 본 연구(주상현, 2002; 이해영·최성락, 2014)도 있고 10년(정준급, 2013)을 주기로 한 것도 있으나 4-5년 단위가 다수(권경득, 1996; 윤영진, 2013; 채원호, 2013)이다. 둘째 기간 설정은 해당 학문의 활성화 정도와 변화를 진단하는 적정 주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북한행정 연구가 매년 변화를 점검할 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느낌과 북한행정 연구 역사가 길지 않다고 볼 때 10년은 북한행정 연구에 있어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너무 길다고 보았다.

와 같다.⁸ 또한 비교행정의 시각에서 연구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만 아니라 남한이나 다른 나라를 함께 비교 연구했는지, 비교대상은 어떤 나라였는지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분단국가의 북한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 통합을 다루었는지 여부도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학분야 논문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참조하여 기술(description), 처방(prescription), 그리고 이론(theory)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물론, 정준금(2013: 35)이 적절히 지적하였듯, 처방적 성격의 논문들도 모두 현상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대안제시 등 처방을 하기 때문에 구별이 상대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상에 대한 기술에서 멈추는 경우와 처방제시가 되었더라도 연구중점이 기술에 있는 경우는 기술로 분류하였다. 처방으로 분류된 정책분야 논문의 경우는 정책대안 제시의 상대방이 북측 정부인지, 남측 정부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인지 등도 점검해 보았다. 한편,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이론의 부재나 기존이론의 현상에 대한 설명력 부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념이나 모델 등 이론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은 이론적 연구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문분야가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출현빈도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과 가장 잘 부합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것이 통상의 예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이로써 개별 학술지의 북한 행정과 관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른 한계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는 전체 연구대상 숫자에 비해 상당히 소수이고, 이 연구가 개별 연구 성과보다는 전체적인 연구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큰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련된 실적을 파악하였다. 한편, 학문별로 복수의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이들의 합계를 통해 특정 학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학문적 기여 비중도 살펴보았다.

IV

분석 결과



IV. 분석 결과

1. 연구실적 분포

지금까지의 논의된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된 북한 행정관련 연구실적의 총괄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북한행정 연구실적 총괄

단위: 편 (%)⁹

분야	행정환경	조직	인사	재무	지방	정책	기타	계
논문 편수	51 (6.2%)	38 (4.6%)	13 (1.6%)	22 (2.7%)	2 5(3.0%)	676 (81.8%)	1 (0.1%)	826
	전통적 행정학 영역 149(18.0%)							

우선 자료수집을 위하여 같은 학술지 게재 논문의 데이터베이스인 KCI를 활용하였던 이재웅 등이 479편의 논문을 수집했던 데 비하면 826편으로 북한 행정 관련 더 많은 논문이 수집되었다. 이런 차이는 이재웅 등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200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제한했고, 키워드 6개로 검색을 한 데 비해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가 더 길었고(시작점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논문게재 마감 시점도 2022년 8월 말까지 연장) 검색어도 12개로 더 많이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9.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전통적인 행정학 영역 중에서는 발표논문 수 기준으로 행정환경(51편), 조직론(38편), 지방행정(25편), 재무행정(22편), 그리고 인사행정(13편), 기타(1편) 순서였다. 정책분야는 676편으로 앞의 다섯 분야의 연구실적을 모두 합친 것의 4.54배나 되어, 북한 행정연구에서 정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81.8%)이 매우 높았다.

한편, 북한정책 연구의 구체적인 정책 분야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먼저 대외·남 정책이 228편(33.7%)이고, 대내 정책이 401편(59.3%), 그리고 기타분야가 47편(7.0%)으로 대내 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가 더 많다. 대외·남 정책 가운데에는 외교, 핵, 대남과 통상·특구, 그리고 군사·안보 순이었다. 그러나 외교, 핵, 군사·안보 분야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관계 및 안전보장 이슈가 대남과 대외 경제분야 사안보다 훨씬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 정책분야에서는 경제를 선두로 하여 산업, 교육, 문화·체육, 복지·보건의료(식량 배급 포함) 관련 정책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대내 정책분야 중에서 북한이 그간 비판을 많이 받아온 치안·체제유지·통제 외에도 국토(토지/주택/도시 포함), 방재·산림, 그리고 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 상대적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개별 정책 분야로 볼 때는 외교, 경제, 산업관련 정책연구가 상위 1-3위였는 바, 이는 북한 행정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정치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북한 연구 동향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이다.

〈표 2〉 분야별 정책 연구 분포

단위: 편 (%)

		정책 분야	실적
북한 정책 연구	대외·남 정책	외교	83(12.3%)
		핵	44(6.5%)
		통상·특구	34(5.0%)
		군사·안보	28(4.1%)
		대남	39(5.8%)
	소 계(대외·남 정책)		228(33.7%)
	대내 정책	경제	73(10.8%)
		산업(농수축/관광/정보화/상업·유통 포함)	63(9.3%)
		국토(토지/주택/도시 포함)	23(3.4%)
		과학기술	9(1.3%)
		노동	5(0.7%)
		복지·보건의료(식량 배급 포함)	43(6.4%)
		방재·산림	18(2.7%)
		치안·체제유지·통제	24(3.6%)
		문화·체육	48(7.1%)
		교육	50(7.4%)
		종교	11(1.6%)
		보훈	7(1.0%)
		여성·청소년	15(2.2%)
	환경	12(1.8%)	
소 계(대내 정책)		401(59.3%)	
기 타	정책기조·복합분야·개발원조	47(7.0%)	
총 계(대외·남 정책 + 대내 정책 + 기타)		676	

2. 행정학 영역별 연구내용 개관¹⁰⁾

먼저 행정환경 영역의 북한행정 연구는 총 51편으로서 다른 주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다. 첫째는 북한이 사회주의 특성상 당의 우위라는 점에 착안하여 당과 국가, 당과 군대, 그리고 당과 내각의 관계 등을 고찰함으로써 체제의 성격과 그것이 당·군, 당·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다. 당-국가 체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김일성 권력장악 과정에서 위상과 역할을 고찰한 연구(이시형, 2006), 당·정·군 관계 역할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집권기를 연구한 논문(김근식, 2002; 김태구, 2019),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태된 북한 행정의 정치적 성격(송용선, 2003)과 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김갑식·이무철, 2006) 등에 대한 연구성고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헌법을 통해 북한의 권력구조 및 그 변화를 분석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요컨대 법·제도적 관점에서 북한의 헌법을 분석하고 그 개정 추이를 추적함으로써 권력구조(박진우, 2010)와 행정체제(박상익, 2010)를 이해하고, 권력구조의 변화를 도출(함성득·양다승, 2010; 최선·김재우, 2018)하며 나아가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최진욱, 1998)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행정사적 접근을 통해 북한 정권 출범시기를 전후한 역사적 사실과 이의 해석을 통해 오늘의 북한에

10) 이 곳에서 인용하는 연구들은 필자가 행정학 영역별로 분류된 기존 연구성과의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대표적 사례로 인용하는 것일 뿐, 인용되지 않은 논문들과 가치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대한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기광서, 2011), 북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조직, 간부 구성(김선호, 2019),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강응천, 2020)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해방직후 북한의 재정·금융상황과 재정대책(예대열, 2020), 국가예산(전현수, 2007), 그리고 조세제도의 형성(박유현, 2017) 등 물적기반에 대한 행정사 연구도 이루어졌다.

북한 조직론으로 분류된 연구 38편 가운데 가장 학자들의 주목을 받은 대상은 북한 관료제이다. 북한 관료제의 특성(김근세·정용덕, 2002), 북한 관료문화(박상익, 2009), 남북한 관료문화 및 윤리 비교(박응격, 2005) 등이 대표적이며, 상당수 연구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시장화와 관련하여 관료의 부패문제를 다루었다(김종욱, 2008; 박완신, 2003; 양정훈, 2010). 이어서 북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원리(이계만, 2003), 변화와 특징(양현모, 2008) 및 운영실태(박영자, 2005)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탁용달, 2010) 그리고 북한과 소련 및 중국의 국방위원회 기능과 운영 비교(이대근, 2004), 군사지휘 조직 및 체계(김동엽, 2013), 치안조직(고현환, 2016; 이운호·남재성 외, 2006) 등 특정한 기관이나 조직을 다룬 논문도 있었다. 또한 남북행정구역의 변천과 발전(오재일·박정민, 2002), 북한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통합(남성욱·황주희, 2018) 등 구체적 주제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아울러 전체로서 국가 조직 및 운영을 탐색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입법조직과 입법체계(김병기, 2020; 박정원, 2017) 및 사법조직(이효원, 2010), 사법체계 및 작용(한동훈, 2021)도 연구되었다.

인사행정 분야는 총 13편인데 북한행정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실적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이다. 크게 두 가지로 연구주제를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 인사행정의 주요 원칙 및 흐름을 찾기 위해 역사적 접근에 기반하여 수행한 연구들과 둘째 북한의 엘리트 층에 주목하고 엘리트에 대한 정책과 그들의 분포, 변화여부 및 인사 경로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그것이다. 김일성의 인사정책과 용인술(김규범, 2019), 북한 간부양성체계의 변천 및 특징(김수연, 2020), 만경대혁명학원 창립과 핵심 인재양성(김옥자, 2014)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 김정일 시대의 경제엘리트(배국열, 2010), 김정은 시대의 엘리트(이성봉, 2020), 북한 군부엘리트의 경력이동 연결망(박근재·김인수, 2013), 북한군 장령진급(김인수, 2011), 김정은 시대 군부 핵심요직 변화(이성춘, 2017) 등은 두 번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군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재무행정 분야로는 총 22편의 논문이 분류되었다. 역시 구체적인 연구주제로 공통되는 논문들을 범주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국가예산 제도 및 변천에 대한 연구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북한 재정법제의 현황과 전망(김지영, 2021), 김정은 시기 북한 재정(김수현·박순성, 2022),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한 예산수입제도 개편(박준호, 2018), 북한 국가예산내 수입제도의 시기별 변화(최정욱, 2020) 등 연구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북한 대학의 회계학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정부회계의 제도와 운영을 역으로 산출해 낸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있었다(윤성만·김미옥 외, 2020; 정형록·최연식 외, 2020; 최연식·정형록 외, 2017). 세 번째는

외국인투자 유치, 국유기업 개혁 등의 관점에서 북한의 재정제도 및 조세제도를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었다(김노창·한영은, 2013; 신현윤, 2007; 정영화, 2008). 마지막 연구그룹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예산 가운데 군사비의 비중이 정확하지, 다시 말해 북한발표 군사비 규모를 검증하는 논문들을 게재하였다(성채기, 2006; 이달희, 2006; 홍성국, 2009).

북한 지방행정 분야는 총 25편이다. 역시 다루어진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각 논문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북한 지방행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관에 대한 연구성과를 제시한 논문들이 눈에 띈다. 북한 지방행정체제(박용수, 2002),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구성형태 및 의결기관(이계만, 2003),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비교(신윤창, 2015)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제도적 시각과 달리 북한 지방행정의 운영실태를 다룬 논문 그룹이 있다. 탈북자 면접 등을 통해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실질적 관계 및 운영 실상을 밝힌 연구(임도빈·안지호 외, 2015), 역시 탈북자 면접을 통해 시군 차원에서 북한 지방행정의 현실을 고찰한 연구(안지호·조충희 외, 2018), 당과 상위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이중의 통제가 일상이 된 지방행정의 실태에 대한 연구(박영자, 2005), 경제난으로부터 시작된 중앙정부 지원의 감소와 그로 인한 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문장순, 2011)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는 북한 지방행정의 기층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사회적 통제역할을 해온 기제로서 인민반에 대한 연구가 있다(배영애, 2018; 채경희, 2017; 홍정기, 2021). 끝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간 지방행정의 통합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이승종·김대욱, 2011),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 실시(송인호, 2016)와 북한지역 지방자치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황선훈, 2018)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정책 연구에서 가장 학문적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분야는 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총 83편이 확인되었으며, 북한의 대외 정책노선, 북한과 특정국과의 양자관계, 해외동포 정책 등이 주요 세부 연구주제였다. 대외 정책노선과 관련해서는 김일성 시기(김보미, 2015), 김정일 시기(임재형, 2001), 그리고 김정은 시기(김관옥, 2013) 등 정권별로 그 특징을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양자 외교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미국(서보혁, 2011; 정현수·김형재, 2010), 대중국(김경수, 2004; 이상숙, 2016), 대유럽(백성호, 2007; 정일영, 2018), 대일본(신정화, 2015; 이미경, 2015) 정책이 주된 연구 테마였다. 해외동포 정책에 대한 연구(진희관, 2011)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 많은 학문적 성과를 보인 분야는 북한 경제정책 분야이다. 김정일 시기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평가(이형석, 2010; 하상식, 2004), 그리고 김정은 시기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고찰과 전망(양문수, 2014; 조동호, 2013) 등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2009년에 단행되었던 북한의 화폐개혁을 주제로 연구한 학자도 적지 않다(김창희, 2010; 이기동, 2010). 총 63편의 논문이 확인된 북한의 산업 범주에는 농·축·산, 관광, 교통, 상업·유통 등 세부 산업분야 정책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물론, 개별 산업 분야에 속하는 연구 실적을 따로 구별하여 파악하였는데 북한의 먹는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였는지 농업개혁(이정철, 2003; 정은미, 2007; 정정현, 2018) 등

농업분야 연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특히 김정은 집권이후 관광사업에 보인 북한의 정책적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이해정·강성현, 2020), 관광 국제화 전략(강채연, 2020), 관광산업 평가(윤인주, 2015) 등 관광정책 연구가 두 번째로 빈도가 많았고, 김정은 시대 수산정책(진희권·윤인주, 2019; 황주희·윤인주, 2022) 등 수산관련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정책에서는 총 50편의 논문을 확인했는데 연구의 주된 테마는 김정일 및 김정은 시기별 교육정책 노선과 정책방향(김경미·김안나, 2020; 신효숙, 2010; 조정아 2014), 유아교육(양옥승·신은미, 2016), 도덕교육(차승주, 2019), 고등교육(엄현숙, 2019) 등 테마가 다양하였다. 문화·체육분야 정책논문은 48편으로 교육분야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언어(이상혁, 2020), 비물질문화(권혁희, 2019; 박영정, 2019), 예술(신혜선·유남원 외, 2020) 과 음악(전영선, 2007)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총 44편의 북한 핵관련 정책을 연구한 학자들은 북한의 핵개발(홍성후, 2008), 핵협상(김일수, 2008), 핵전략(박휘락, 2017) 등 핵 능력 강화과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핵보유국에 들어선 국가들과의 비교(길병옥, 2007; 이성훈, 2019)를 통해 북한의 핵 정책을 검토하는 연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43편의 연구성과가 확인된 복지·보건의료 정책분야에서 연구자들은 주로 북한 장애인 복지 제도 및 정책(이철수, 2019; 정지웅·이철수, 2016), 아동보호 정책(이윤진, 2016), 보건의료체계(조창익, 2020) 및 코로나 대응 역량(이승열, 2021) 등 테마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통상·특구 분야에는 34편이 속했는데, 정책의 초점이 국내가

아닌 해외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외·남 분야로 분류하였지만, 정책 영역면에서는 전체 경제정책의 구성 부분으로서 볼 수 있는 만큼 경제정책과 합산될 경우 외교분야를 제치고 1위에 오를 만큼 학술적 관심을 많이 받았다. 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특구 및 경제개발구에 대한 전망과 평가(우평균, 2019; 유현정·정일영, 2016) 및 성공을 위한 과제(홍순직, 2003)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3. 연구실적 추이

2022년을 기점으로 5년간씩 끊어서 6개 구간을 만들어 북한 행정연구 추이를 확인하였다.

〈표 3〉 북한행정 연구실적 추이 (전체)

단위: 편

영역/기간	-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2018-2022	계
행정환경	0	4	9	13	9	16	51
조직론	0	4	10	10	6	8	38
인사	0	0	1	6	3	3	13
재무	0	0	3	4	2	13	22
지방	0	1	7	4	7	6	25
정책	1	20	89	135	187	244	676
기타	0	0	0	0	1	0	1
전 분야	1	29	119	172	215	290	826

북한행정 연구실적 추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 3>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전체적 증가세가 눈에 띈다. 1997년 이전 겨우 1편이었던 연구실적이 1998-2002시기에는 2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기간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북한 행정과 관련한 학문적 관심도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03-2007년에도 연구성과의 증가 추세는 이어져 172건을 기록했다. 연구실적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13-2017, 그리고 2018-2022년 기간에는 증가속도 면에서는 전 시기에 비해 주춤하는 추세이다. 분석기간 동안 정책분야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연구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하여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전 기간을 통한 계속적 증가 추세는 전통적 행정학의 영역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직론과 인사행정 분야는 2008-2012기간의 연구실적에 비해 그 이후 기간에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지방행정 분야도 시기별로 분명한 변화추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행정환경과 재무행정 분야의 특징은 최근 기간에 연구가 전에 비해 활발해 졌다는 점이다. 특히 재무행정 분야에서 그러한데, 2018년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이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을 밝히자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행할 북한의 능력 검토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 조세관련 변화 가능성 등 북한의 재정에 대한 관심이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통적 행정학 분야별로는 정책분야처럼 뚜렷한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표 4>를 통해 전통적 행정학 영역만 따로 고찰하였다. 1998-2002

시기에 9건을 기록한 연구실적은 그 다음 시기 약 3배가량 증가하였고, 2008-2012 시기에도 소폭 늘었으나 2013-2017 기간에는 27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46건으로 다시 상승하였으나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표 4〉 북한행정 연구실적 추이 (전통적 행정학 영역)

단위: 편

영역/기간	-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2018-2022	계
전통적 행정학 영역	0	9	30	37	27	46	149

〈표 5〉는 정책분야 중에서도 분야별 특정 영역에서 연구실적의 흐름을 보여준다. 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 전방위 외교로 전환한 1998년 이후에는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 연구도 최근년으로 올수록 더 많은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산업정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세이다. 북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김정은 집권이후 연구가 대폭 늘었는데, 이는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정으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문화, 체육 정책에 대한 관심은 최근 기간에 크게 늘었는데, 김정은이 권력 안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통문화유산 정책 등의 특징파악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개발 진전과 함께 북한 핵정책 관련 논문도 더 많이 연구, 게재되고 있다. 만성적인 식량난과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복지·보건의료분야에서도 북한에 대

한 연구가 계속 늘고 있다. 다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연구는 최근 기간동안 연구 실적이 급락했고, 꾸준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던 통상·특구 분야도 2018-2022기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5〉 북한행정 연구실적 추이 (연구실적 다수 정책분야)

단위: 편

분야/기간	-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2018-2022	계
외교	1	4	15	16	26	21	83
경제	0	3	10	18	12	30	73
산업	0	2	6	13	16	26	63
교육	0	0	5	9	19	17	50
문화·체육	0	1	4	9	9	25	48
핵	0	0	5	9	10	20	44
복지·보건의료	0	0	2	4	15	22	43
대남	0	4	5	16	11	3	39
통상·특구	0	1	10	5	11	7	34
종합	1	15	62	99	129	171	477

〈표 6〉은 연구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서의 북한정책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가 컸던 2013년 이후 북한의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연구가 늘었고, 같은 시기 북한내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투쟁 분위기를 반영한 듯 치안·체제유지·통제 정책 연구도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김정

은의 집권이후 건설분야에 대한 강조, 평양내 새로운 거리 및 1만세 대 살림집 건설 등과 관련하여 국토관련 분야 정책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아울러 최근 북한은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북한 방재·산림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기당 연구실적의 절대치는 아직 거의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상태이다.

〈표 6〉 북한행정 연구실적 추이 (연구실적 소수 정책분야)

단위: 편

분야/기간	-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2018-2022	계
군사·안보	0	2	3	3	11	9	28
치안·체제 유지·통제	0	1	1	7	7	8	24
국토(토지·주택· 도시 포함)	0	0	5	1	9	8	23
방재·산림	0	0	0	4	3	11	18
여성· 청소년	0	0	6	1	4	4	15
환경	0	0	1	0	6	5	12
종교	0	0	2	5	1	3	11
과학기술	0	1	2	3	0	3	9
보훈	0	0	1	3	1	2	7
종합	0	4	21	27	42	53	147

4. 연구방법론 분석

〈표 7〉은 북한행정 연구들이 사용한 연구방법론을 보여준다. 먼저 계량적 방법론을 사용했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였다. 결과는 북한 행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은 압도적으로 비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기타 1건을 제외한 825건 분석 대상 논문들 중 오직 34편(4.1%)만이 계량적 방법론을 취하였다. 분야별로는 행정환경,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그리고 지방행정 등 전통적 행정학 영역을 다룬 연구들의 비계량 비율이 높았고(141편/149편, 96.6%), 특히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계량적 연구가 아예 없었다. 정책분야에서는 비계량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다(95.7%). 계량적 방법론중에서는 통계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통계분석을 활용한 연구 중에는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관료부패의 실상을 파악한 연구(채원호·김옥일 외, 2006), 북한 장령급 군인들의 승진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출신성분, 전문부서 근무 및 지휘경력보유 등 여러 독립변수와 진급이라는 종속변수간 관계를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해 규명한 연구(박근재·김인수, 2013), 남북한 선거 주기와 정부예산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남북한의 정치적 예산순환 여부를 검토한 연구(김정완, 2008) 등이 있었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노동신문, 경제연구 등 다양한 북한의 문헌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연구가설 검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는 계량적 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이건웅·차성현, 2022: 27). 텍스트마이닝 기법이라는 범주하에도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토픽모델링, 단어네트워크 등 채택하여 활용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다. 북한 정책분야 연구에서는 통계분석 외에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적지 않았다. 구체적 연구사례로는 특정 기간동안 북한의 경제학술지인 경제연구에 게재된 다량의 논문 제목에서 빈번하게 제시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주요 북한 경제정책 토픽을 도출한 연구(강경화, 2020; 이가영, 2021)와 장기간에 걸친 수산관련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85개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통계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그 단어들 간 네트워크를 가시적으로 분석해냄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수산사업소 정책 구조파악을 시도한 연구(황주희·윤인주, 2022) 등이 있었다. 한편, 경제정책 영역에서는 일반균형모델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을 활용하여 북한의 농업개혁조치(정은찬, 2022)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를 거시변수의 계량적 변화 전망을 통해 검토한 연구(이영훈, 2002)가 눈에 띄었다. 한편, 사회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도 있었는데, 장기간에 걸친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 명단 분석을 통해 두드러지는 인물들을 확인하고, 중앙성(centrality) 등의 개념을 기준으로 관계망을 도출하는 한편,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연구(표윤신·허재영, 2019)¹¹가 그것이다. 북한 과학자들이 해외 과학저널에 투고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저자 및 공저자 그리고 그들의 소속기관에 대한 관계망 분석을 통해 북한 과학기술계의 연결 구조와 그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연구(윤정원, 2021)도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예에 속한다. 한편, 북

11. 다만, 이 논문은 북한정책 분야가 아니라 북한행정의 환경을 다룬 논문이다.

한산 화장품에 대한 화학분석을 통해 성분과 제품의 수준을 밝히고 탈북자 설문을 통해 북한내 사용도 등을 추정한 계량적 연구도 있었다(남성욱·오준철 외, 2017). 비계량적 방법 가운데는 문헌분석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91.5%). 이는 전통적 행정학 영역(91.0%) 이나 정책분야(91.7%) 모두 공통적이었다. 다음으로는 총 38편의 연구가 면접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예외 없이 대상은 모두 탈북자였다. 그 다음은 사례연구가 26편 있었다.

〈표 7〉 연구방법론 분석결과

단위: 편

	행정환경 (51)	조직 (38)	인사 (13)	재무 (22)	지방 (25)	정책 (676)	종합 (825) ¹²
계량 vs 비계량	*계량 : 1 - 사회네트 워크분석 1	*계량 : 1 - 통계분석 1	*계량 : 2 - 사회네트 워크분석 1 - 통계분석 1	*계량 : 1 - 통계분석 1	*계량 : 0	*계량 : 29 - 텍스트 마이닝 10 - 통계분석 9 - 경제계량 모델링 3 - 빈도분석 5 - 화학분석 1 - 사회네트 워크분석 1	*계량 : 34(4.1%)
	*비계량 : 50 - 문헌 49 - 면접 1	*비계량 : 37 - 문헌 35 - 면접 2	*비계량 : 11 - 문헌 10 - 면접 1	*비계량 : 21 - 문헌 16 - 사례 4 - 면접 1	*비계량 : 25 - 문헌 21 - 면접 4	*비계량 : 647 - 문헌 593 - 사례 22 - 면접 29 - 개념적 모델링 2 - 홈페이지 시각요소 분석 1	*비계량 : 791(95.9%)

	행정환경 (51)	조직 (38)	인사 (13)	재무 (22)	지방 (25)	정책 (676)	종합 (825) ¹²
단독 vs 비교	*단독 : 48 *비교 : 3 - 남북 2 - 중국 1	*단독 : 30 *비교 : 8 - 소련 - 중국 3 - 남북 2 - 중국 2 - 러시아 - 중국 1	*단독 : 11 *비교 : 2 - 중국 1 - 중국 - 베트남 1	*단독 : 18 *비교 : 4 - 남북 4	*단독 : 20 *비교 : 5 - 남북 4 - 중국 1	*단독 : 577 *비교 : 99 - 남북 54 - 중국 23 - 독일 7 - 파키스탄 4 - 이란 4 - 기타 ¹³ 21	*단독 : 704 *비교 : 121
통합 vs 비통합	*통합 : 1 *비통합 : 50	*통합 : 4 *비통합 : 34	*통합 : 0 *비통합 : 13	*통합 : 1 *비통합 : 21	*통합 : 6 *비통합 : 19	*통합 : 32 *비통합 : 644	*통합 : 44 *비통합 : 781
기술 vs 처방 vs 이론	*기술 : 50 *처방 : 1	*기술 : 35 *처방 : 3	*기술 : 13 *처방 : 0	*기술 : 19 *처방 : 3	*기술 : 19 *처방 : 6	*기술 : 577 *처방 : 90 - 남한정부 44 - 남·북정부 31 - 북한정부 7 - 인접국·국제사회·UN 7 - 기타 1 *이론 : 9	*기술 : 713 *처방 : 103 *이론 : 9

두 번째로는 각 연구가 비교연구를 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북한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포함하여

12_ 기타 분야로 분류된 1편을 제외한 숫자임.

13_ 동유럽, 베트남, 쿠바, 리비아, 이라크, 이스라엘 등이었다. 한 연구에서 복수 국가를 대상으로 북한과 비교한 경우가 있어 전체 비교국가의 합이 비교연구 논문 편수보다 많다.

비교한 연구인지 여부를 보았다.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훨씬 많았지만 비교연구의 비율도 상당했다. 전통적 행정학 영역에서 비교연구의 비율은 14.8% 였고, 정책연구에서 그 비율은 14.6%로 거의 비슷하였다. 비교 연구중 남북한을 비교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54.5%), 다음으로는 중국(23.2%)순이었다. 독일과 파키스탄 및 인도, 이란 등도 비교대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대개 독일은 통일관련 사안,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 등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 전략, 이란은 북한의 대미 핵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북한과 비교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 방법론 검토요소는 아니지만 북한 행정 관련 연구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 통합문제를 다루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 연구가운데 남북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는 5.3% 였다. 정책분야 연구 가운데 통합연구 비율은 4.7%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이하게도 지방행정 분야의 남북통합에 대한 연구는 무려 24%나 되었다. 이 비율은 조직론 분야에서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10.5%가 남북통합을 연구주제로 삼고 있었다. 행정환경, 재무행정론 분야에서는 한 편만이 이 주제에 대한 논문이었고 인사행정론 분야에서는 해당 주제를 다룬 연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각 연구자의 의도에 기초한 연구의 성격을 기술, 처방, 그리고 이론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술적 연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총 825편 가운데 713편이 기술적 연구였다(86.4%). 다음으로는 103건을 기록한 처방적 연구(12.5%)였고, 이론적 연구는 총 9편으로 1.1%에 그쳤다. 정책관련 연구의 특성상 처방적 연구의 비율은 정책분야의 연구(13.3%)가

전통적 행정영역에서의 연구(8.7%)보다 높았다.¹⁴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처방적 연구비율은 2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남북통합관련 주제의 비중이 높은 것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에 있어 남북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이것이 통합을 위한 대안제시로 이어진 것이다. 조직론 분야에서 전통적 행정학 연구 영역의 평균 보다 높은 처방적 연구비율(7.9%)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처방적 접근방법을 취한 정책분야 연구 가운데 정책대안을 제시한 상대방으로는 우리정부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44편/90편, 48.9%). 남북한 정부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그 뒤를 이었으며(31편/90편, 34.4%) 북한정부에 향해 대안을 제시한 논문 비율은 7.8%(7편/90편) 였다. 인접국 등 국제사회와 UN을 향한 대안 제시도 7편(7.8%) 있었다. 정책 상대방에 따라 처방내용의 강조점도 상이했는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안보적 대비, 통합을 위한 구체적 준비 및 대북지원을 주문했다. 남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주로 교류협력 활성화 및 확대였다. 다음으로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개혁개방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였다. 인접국, 국제사회와 UN에 대해서는 평화를 위한 핵 협상 진전 동참과 북한과의 개발협력 권고가 정책 대안관련 내용이었다. 한편, 이론적 연구는 북한 정책 분야에서만 9건 수행되었다. 이는 여러 정책분

14. 북한정책 분야에 한정하여 살펴볼 때 기술이 85.4%, 처방이 13.3%, 이론이 1.3%여서 한국의 정책학 논문들을 분석하였던 정준금의 결과(실증이 48.7%, 처방이 44.7%, 이론이 6.6%)와 차이가 있었다. 북한정책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북한에 대한 처방의 실효성과 실태 파악 우선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 차이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야에서 북한의 행태나 정책에 대한 기존 이론의 설명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념의 보강이나 모델 등의 제시를 통해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임으로써 이론적 기여를 지향하는 연구를 지칭한다. 이 범주에 드는 논문으로는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방법론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칼레츠키의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기반하여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설명하려 한 연구(이영훈, 2000)가 있다. ‘세기와 더불어’에서 추출한 군사·안보 키워드들을 기초로 단어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을 도출해 낸 논문(황일도, 2013)도 같은 이론적 성격을 띤다. 또한 북중관계가 강대국과 약소국 간 비대칭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태가 기존의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안보 제공과 이에 대한 댓가로서 약소국의 자율성 축소 및 침해 모델로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점에 착안하여 한델(M. Handel)의 이론적 가설의 관점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의 전략’을 모색한 연구(박상현, 2009)도 이론적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전술했듯 이론적 연구 실적은 극히 적었다.

5. 논문출처 분석

다음으로는 북한행정 연구 분야별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학술지와 발간 기관을 함께 표기하여 기여도를 검토하였다. 북한행정 환경분야에 속하는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학술지는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하는 군사로 5편을 기록했

다. 다음으로는 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간하는 현대북한연구로 4편을 게재하였다. 이어서 극동문제연구소 및 통일연구원이 각각 발간하는 한국과 국제정치 및 통일정책연구가 각 3편씩으로 게재논문의 양적 측면에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이어 한국정치학회의 한국정치학회보 등 7기관의 발간 학회지가 각 두 편씩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22개 기관의 학술지가 각 한 편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리스트의 상위에 위치하는 학술지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면 역사(군사, 한국사학보, 역사와 현실), 북한 연구(현대북한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통일정책연구, 통일과 평화, 평화연구) 및 정치학(한국정치학회보) 이다.

〈표 8〉 북한 행정환경 분야 논문 출처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군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5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4
한국과 국제정치	극동문제연구소	3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3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
통일과 평화	통일평화연구원	2
평화연구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2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2
韓國史學報	고려사학회	2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소(서강대)	1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소(경성대)	1
국가정보연구	한국국가정보학회	1
홍익법학	법학연구소	1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
평화학연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

〈표 9〉은 북한 조직론 분야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와 발행기관을 보여준다. 북한연구학회가 발간하는 북한연구학회보와 한독사회과학논총이 3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밖에 현대북한연구 등 5개 학술지가 각 두 편씩 이 분야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행정학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인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행정연구소, 한국행정사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기관이 각 1편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표 9〉 북한 조직론 분야 논문 출처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3
한독사회과학논총	한독사회과학회	3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2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법학논총	법학연구소	2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2
북한학연구	북한학연구소	1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	1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	1
행정논총	한국행정연구소	1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회	1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1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회	1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

2편 이상을 게재한 학술지 중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사회과학), 한국동북아논총(사회과학), 그리고 법학논총(법학)을 제외하면 북한연구학회보, 현대북한연구, 통일문제연구, 통일정책연구 등 모두가 북한 연구를 배경 학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등 8개 기관도 연구실적이 있지만 논문의 양이 적어 전체적인 비중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인사행정분야는 논문 수도 적을 뿐 아니라 다수 게재 논문을 차지하는 학술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다양한 학술지가 이 분야 연구 실적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행하는 국방정책연구와 북한연구학회보가 각 두 편씩, 현대북한연구 등 9개의 학술지가 각 한 편씩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학술지의 배경학문으로는 크게 북한학과 일반사회과학으로 분류하는 데 무리

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 북한 인사행정 분야 논문 출처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2
현대북한연구	심연북한연구소	1
북한학보	북한연구소	1
공공사회연구	한국공공사회학회	1
민족연구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1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소	1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1
국방연구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1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1

〈표 11〉 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 재무행정 분야 논문 출처도 비슷한 실적을 가진 학술지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오직 3개 학술지만이 2개씩의 이 분야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데, 각 학문적 배경도 법학(동북아법 연구), 북한 연구(통일문제연구), 그리고 국방정책(국방정책연구) 등 다양하다.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1개의 논문을 게재한 16개의 학술지 중에 조세와 회계분야 전문 학술지가 다수인 점이 특징이다.

〈표 11〉 북한 재무행정 분야 논문 출처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소	2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2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1
북한학연구	북한학연구소	1
조세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
회계정보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1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1
세무와회계저널	한국세무학회	1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1
통일과 법률	법무부	1
정치·정보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1
정부회계연구	(사)한국정부회계학회	1
회계저널	한국회계학회	1
북한학보	북한연구소	1
회계와 정책연구	한국회계정책학회	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	1
북한법연구	통일과 북한법학회	1
The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공공정책연구소	1

북한 지방행정 분야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모두 20개이다. 이 중 대한정치학회보가 3편, 행정논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지방자치법연구 등 3개 학술지가 각 2편씩 생산하였다. 한국지방자치연구 등 나머지 16개 학술지가 1편씩 기여하였다. 지방행정이라는 분야의 특성때문인지 북한연구에 초점을 두는 전문지의 비중이 조금 열

어지고 지방자치 및 정치학, 그리고 법학을 전문분야로 하는 학술지가 이 분야 실적을 분점하고 있다.

〈표 12〉 북한 지방행정 분야 논문 출처

학술지명	발행기관	계재 편수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	3
행정논총	한국행정연구소	2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2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
한국지방자치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1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1
평화학연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
통일과 평화	통일평화연구원	1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1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1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
통일과 법률	법무부	1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1
군사발전연구	군사학연구소	1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1
법학연구	법학연구소	1
동아법학	법학연구소	1

마지막으로 북한정책 분야인데, 연구의 대상이었던 논문이 677편이어서 그 논문들을 배출한 학술지도 많고 다양하여 실적 순으로 나누어 보았다. <표 13-1>은 10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만을 따로 분류한 것이다.

<표 13-1> 북한 정책분야 논문 출처 (게재실적 최상위그룹)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38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30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29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23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3
북한학연구	북한학연구소	22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17
평화학연구	한국평화연구학회	16
북한학보	북한연구소	15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5
통일인문학	인문학연구원	14
통일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13
통일연구	연세대통일연구원	12
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0

북한연구학회보 등 14개 학술지가 277건을 게재하여 전체 북한 정책분야 논문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연구학회보가 38건으로 최다 논문을 게재하였다. 북한연구학회보, 현대북한연구, 통일

정책연구 및 통일문제연구 등 상위에 포진된 학술지의 다수가 북한 연구에 중점을 두는 학술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표 13-2〉 북한 정책분야 논문 출처 (게재실적 차상위그룹)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9
정치·정보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9
남북문화예술연구	남북문화예술학회	9
국방연구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8
한국과 국제정치	극동문제연구소	7
신아세아	신아시아연구소	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6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6
세계지역연구논총	한국세계지역학회	6
통일과 평화	통일평화연구원	6

다음으로는 6개부터 9개사이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 그룹을 별도로 분류해보았다. 국가안보와 전략 등 여전히 북한연구 비중이 높은 학술지가 나타나지만 정치·정보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인문사회 21 등 배경 학문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가 보인다.

〈표 13-3〉 북한 정책분야 논문 출처 (게재실적 중위그룹)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입법과 정책	국회입법조사처	5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5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원	5
동북아연구	동북아연구소	5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5
중소연구	아태지역연구센터	5
한국군사학논집	화랑대연구소	5
융합보안 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4
The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공공정책연구소	4
도덕윤리과교육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4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4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	4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4
아세아연구	아세아문제연구원	4
통일과 법률	법무부	4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소	3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3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3
동서연구	동서문제연구원	3
교육사회학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3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3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원	3
한국의료법학회지	한국의료법학회	3
북한법연구	통일과북한법학회	3
아태연구	국제지역연구원	3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3

이어서 게재 편수가 3-5개 정도의 학술지 그룹을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이 그룹의 특징은 북한연구 전문 학술지의 비중이 더욱 낮아지면서 입법과 정책, 국방정책 연구, 사회과학연구 등 정책연구 지향적인 학술지가 나타나고, 역사, 농업, 의료분야로 다루는 학문의 스펙트럼이 더욱 확산되는 점이다. 한국정치학회보도 이 그룹에 속하였다.

〈표 13-4〉 북한 정책분야 논문 출처 (기타 게재그룹)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2
동방학지	국학연구원	2
문화와 정치	평화연구소	2
선교신학	한국선교신학회	2
유아교육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
유럽연구	한국유럽학회	2
해양정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
문화정책논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보화정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소	2
법학연구	연세대법학연구원	2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학회	2
아주법학	법학연구소	2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센터	2
평화와 종교	한국평화종교학회	2

학술지명	발행기관	게재 편수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
한국교육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	2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
한약정보연구회지	한약정보연구회	2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
부동산법학	한국부동산법학회	2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원	2

다음으로는 2편을 게재한 그룹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표 13-4>는 이 그룹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북한연구 중점 학술지의 비중이 낮아지고 문화, 선교, 유아, 해양, 교육, 지적, 한약, 디지털, 부동산 등 배경 학문분야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정책학회보는 이 그룹에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1편을 게재한 학술지 그룹은 지면관계 상 생략하였다. 다만, 한국행정학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정책개발연구, 환경정책연구 등이 이 그룹에 속하였다.

V

북한행정 연구 평가



V. 북한행정 연구 평가

지금까지 한국연구재단의 KCI에서 검색된 북한행정 연구 실적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았다. 추세적 관점에서 연구실적의 증가 및 연구자 확대, 주제의 다양화 등 과거보다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행정 연구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1. 북한행정 연구의 문제점

첫째는 연구의 과소와 편향이다. 먼저 행정학의 전통적 영역-행정환경,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에서 이루어진 북한 행정에 대한 연구가 적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 분야 논문은 총 149편이고 1998년부터 연구성과부터 검색되었는데 1년에 평균 5.96편 정도가 발표된 셈이다.¹⁵ 이 또한 5개 분야 논문을 다 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본다면 연평균 1.2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분야별 편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대웅·이다솔 외(2022)도 북한행정을 다룬 연구 가운데 조직, 인사, 예산 등 행정학 고유의 영역에 관한 논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추이 분석을 통해서도 전통적 행정학영역에서의 연구실적이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 2003년

15_ 대표적 행정학 관련 학술지 한국행정학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행정논집, 행정논총, 정부학연구, 지방정부연구에서만 매년 약 270편의 논문이 게재된다. (2022년 기준, KCI 학술지 검색)

이후 이 분야 연구실적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체양상을 띄고 있다. 즉, 현재의 연구 과소문제가 미래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이 분야들을 다룬 논문을 전부 합쳐도 정책 관련 논문 676편의 1/4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북한 행정연구가 정책분야 연구쪽으로 매우 편중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하였던 국내 행정학 연구 경향에 대한 고찰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으로, 국내 행정학 분야에서는 대략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시기에는 전통적 영역의 연구가 정책 관련 연구에 비해 다수였고, 이후로는 정책분야 연구가 상대적으로 보다 활성화 되었지만 그 차이가 북한 행정 연구에 있어서만큼 극단적으로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북한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도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비중이 높다는 점이 그것인데, 북한의 핵, 군사·안보 정책이 전자에 산업, 통상·특구 정책이 후자와 관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와 경제정책 관련 연구비중은 더 높아진다. 반면, 국토, 방재·산림, 여성·청소년, 환경, 과학기술·정보화 등 북한주민의 현재 삶을 규정하고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우리의 이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서의 북한정책에 대한 연구실적은 그 절대치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두 번째는 연구주제의 공백 과다이다. 행정학 영역별 연구내용 개관에서 이미 설명하였듯, 그간의 북한행정 연구는 전통적 행정학 영역에서 여러 주제에 대해 연구성과를 축적시켜 왔다. 다만, 연구실적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한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데 그것은 아직도 연구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기다리는 연구 주

제가 쌓여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 행정학 영역 가운데 향후 북한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공백을 메워가야 할 부분이 많고 남은 숙제가 상당하다는 의미이다. 행정학 영역별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북한행정 연구현황에 대한 연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학 교과서들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김종섭·장태옥 외, 1993), 행정학 각론별 교과서 분석연구(박통희, 1996; 유민봉, 1996; 하연섭, 1996; 박광국·채경진, 2013) 등 행정학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 깃든 고전들은 향후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 번째는 행정학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북한행정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 분석에서 이미 확인하였지만, 전통적 행정영역 가운데 어느 분야에서도 행정학 관련 학술지가 압도적 우세를 보인 곳이 없었다. 오히려 북한 연구관련 학술지가 전 분야에 걸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학문적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사실 이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행정학 영역은 행정학자들의 전문성이 가장 높고 따라서 학제적 성격상 타 학문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기고할 해도 다수가 되기 힘든 분야다. 그런데 행정학자들의 이 분야에서의 북한 행정연구가 희소하므로 연구실적의 절대 수치가 낮고 따라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의 공백 분야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책 분야 연구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북한정책 분야의 연구는 전통적 행정학 영역에서의 북한행정 연구보다는 훨씬 많았다. 하지만 행정학(정책분야 포함) 학술지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했던 결과는 북한

정책분야에서도 게재 논문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게재논문 최상위권에는 북한 연구 전문 학술지가 위치하였고, 하위권으로 가면 예술, 선교, 유아, 지적, 한약, 디지털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지들이 해당 분야 북한정책 연구를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행정학 관련 학술지가 양적 연구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들과 동급에 위치했던 것이다. 결국 전통적 행정학 영역의 연구는 대부분 행정학 연구자들이 아닌 타 분야 연구자들의 북한행정 환경, 조직, 인사, 재무, 그리고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 성과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뿐 아니라 북한 정책에 대한 연구도 행정학 연구자보다는 사실상 북한 연구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이끌어 왔다는 판단이다. 한국사회와 행정에 게재된 정책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정준금(2013)은 조사된 논문 저자 중 경영학 전공자 3인이 공저자로 등록된 1편을 제외하고 모두 행정학 전공자였다고 언급하였다. 이 발견을 북한 정책 연구자들의 다수가 행정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본 연구가 확인한 사실과 함께 고려하면 북한에 관한 사항은 동일한 정책분야라 하더라도 국내 각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행정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는 또한 같은 정책분야를 연구한다 해도 남한과 북한의 정책을 다루는 학자들은 서로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다른 중요한 사실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¹⁶

16_ 남한의 정책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체로 문화, 복지, 정보, 교육, 지역발전, 환경 등 (이혜영·최성락, 2014), 또는 환경·에너지, 보건·복지, 정부구성 및 운용, 정보·IT 등(윤영진, 2013) 분야의 순서로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북한정책 연구에서도 동일한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행정연구의 한계로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사안은 연구방법의 획일성이다. 대다수에 해당하는 95.9%의 연구가 비계량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고, 비계량적 방법을 취한 절대 다수(91.5%) 연구자들이 문헌분석 기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발견한 비계량적 연구방법의 높은 비중은 우리 행정학 연구경향과 큰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1967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기고된 논문 541편을 분석했던 권경득(1996)은 행정학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70.4%가 서술적 접근(본 연구의 비계량적 방법에 해당)이었고, 29.6%가 통계적 접근과 모의실험·수학적 모델(본 연구의 계량적 방법에 해당)을 활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권경득의 연구를 이어 1995년부터 2001년간 같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45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을 분석한 주상현(2002)은 56.2%가 서술적·질적(본 연구의 비계량적 방법에 해당)이었고, 43.7%가 통계적·수학적 모델(본 연구의 계량적 방법에 해당)을 활용하였다면서 오히려 계량적 방법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사회와 행정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 150편을 추출하여 연구방법을 분석한 정준금(2013)은 연구방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는데, 질적, 양적, 사례, 비교 분석이 그것이다. 앞의 두 연구가 비계량 대 계량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네 가지 연구방법을 함께 놓고 분류하여 평면적 비교가 부적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금은 양적분석(본 연구의 계량적 방법에 해당)의 비중이 22%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표 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게재 논문 중 정책논문이 취한 방법론 분석¹⁷

구분	합계(편수)	%
질적분석	66	44.0
양적분석	33	22.0
사례분석	40	26.7
비교분석	11	7.3
합계	150	100.0

우리 행정학계의 연구방법이 북한행정 연구보다 계량화 정도가 높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비계량적 방법을 선택한 연구 중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취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권경득, 주상현은 비계량적 방법을 세분화하여 조사하지는 않아 본 연구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정준금의 연구를 참고하면 간접 비교가 가능하다. 〈표 14〉에서 보듯 사례분석과 비교분석이 각각 26.7%와 7.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북한 정책분야의 방법론 중 계량적 방법은 4.3%, 비계량적 방법은 95.7%였다. 비계량적 방법 중 문헌분석은 91.7%, 사례분석은 3.4%였다. 다시 말해 전체로 환산할 경우 본 연구 중 문헌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7.8%에 해당¹⁸하므로 정준금의 연구에서 질적분석의 대부분을 문헌분석이 차지한다 가정하더라도 문헌분석 비중은 북한행정 연구에서 훨씬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례분석은 한국 행정

17_ 정준금, 2013: 40. 발췌 인용

18_ 95.7% 비율의 비계량적 방법 중 91.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곱은 87.8%가 된다.

연구에 비해 매우 낮은 빈도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북한 정책연구 전체를 놓고 볼 때 14.7%가 비교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행정 연구보다 비교방법의 활용률은 더 높다. 그러나, 비계량 방법론의 압도적 우세 및 그 중 문헌분석 방법의 절대 다수 점유를 통한 방법론적 획일성이 북한 행정 연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물론 연구방법론에 우열관계는 없다. 그러나 북한 행정이라는 실체에 보다 정확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에 기초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행정학자들의 북한행정 연구참여 부진 사유

그렇다면 행정학 연구자들은 왜 북한행정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가? 첫째는 자료의 부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그간 폐쇄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매년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국가예산마져 총액이나 분야별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연도별 증가율 정도만 공개하는 등 연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또한 공개하더라도 정확성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연구자료의 부족은 다른 학문 분야 학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기에 행정학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구자료 획득의 어려움은 행정학 연구를 제약하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북한연구 전반에 대한 일반적 제약요소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행정학이 필요로 하는 북한의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떨어질 수는 있다. 아무튼 연구 자료의 제약

은 일반적이긴 하지만 행정학 전공자들의 북한 연구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미국 행정학에서 비롯되어 서구중심의 학풍이 지배적인 우리 행정학계의 분위기가 북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다. 여기에 냉전 및 한국전 등으로 인해 이데올로기의 영향까지 더해져 북한이 아예 행정학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심지어 비교행정 교과서에서도 북한은 주변적 연구대상이다. 2000년 이후 비교행정을 다룬 교과서 7종(김광웅, 2004; 김종호, 2004; 유종해·김택, 2011; 김성남, 2016; 임도빈, 2016; 박중훈·조세현 외, 2018; 박천오·하태권 외, 2018) 가운데 다수인 4종은 북한을 다루고 있지 않다.¹⁹

세 번째는 북한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행정학 연구자들이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일종의 진입장벽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북한 행정의 환경관련 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북한의 행정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행정을 둘러싼 환경적 특이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를 지향했다는 것과 세습을 통한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해 왔다는 북한의 두 가지 특성이 북한 행정에 주는 함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낯선 과제가 우리 행정학 연구자들의 북한 행정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다. 행정학 전공자들과 타 분야 북한 행정 연구자들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19_ 북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비교행정 교과서 3종도 타국 행정에 대한 서술 등 분량 제한으로 제도적 기술(행정체제) 정도에 머물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실은 이런 진입방지 턱을 넘는데 효과적인 협력기제가 부재함을 뜻한다. 행정학계가 북한행정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북한 행정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VI

북한행정 연구 발전방안
제언



VI. 북한행정 연구 발전방안 제언

지금까지 북한행정 연구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북한행정 연구가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방안을 북한자료 공개의 확대, 행정학계의 참여 증진, 학제적 연구 교류 플랫폼의 활성화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1. 자료공개의 확대

먼저, 북한행정 포함 북한관련 자료의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과거보다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나 종류가 늘고, 자료 입수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외 타 대상에 대한 연구자료 입수의 가능성과 편리성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물론 자료공개를 확대할 일차적 책임 주체는 북한이다. 북한도 발전을 위해 인재교육을 중시하고 국제적 학술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학술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은 2021년 7월 사상최초로 UN에 SDG 이행점검 보고서(VNR : Voluntary National Report)를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SDG 목표별 이행점검 현황을 보고하면서 식량부족량, 전기사용 인구 비율, 1인당 실질 GDP 연간성장률,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15-19세 사이의 청소년 비율 등 통계자료를 공개하였다. 아울러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5.63%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국제적 지원을 받는

다면 50.34%까지도 감축할 수 있다면 국제협력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UN SDG Knowledge platform, 2021). 다만, 이러한 자료와 통계의 공개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는 바, 북한이 지속적으로 공개 확대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우리 정부도 자료 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다. 북한이 발간한 자료는 과거 불온자료 시대를 거쳐 지금은 특수자료로 구분되고 있다. 자료 열람 및 대출에 우리 자료와는 다른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on-line 활용은 되지 않기에 지방 등 원거리 거주 연구자에게는 실질적 접근제한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북한의 각종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한 복판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는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만 막는다는 것은 지구촌 시대에 실효성도 떨어진다. 언론도 북한 외무성 등 북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조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현실에서 연구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 정부도 통일부 홈페이지상의 북한정보포탈 구축을 통한 여러 자료 제공 등 자료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2년 5월 시작한 남북회담사료 공개제도이다(『한겨레신문』, 2022/05/03). 국내외에서 30년이 지난 외교사료를 공개하는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남북간 회담대화록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회담관련 사료를 공개하고 있다. 외교사료 공개가 학자들에 의해 풍성한 연구성으로 이어져 왔듯, 회담사료 공개도 북한행정을 포함하여 북

한관련 연구를 자극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북한 행정 관련 자료의 공개 확대는 연구방법론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다. 어떤 연구 방법론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북한 연구자료, 특히 1차 자료의 수집 가능성 및 용이성과 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2. 행정학계의 참여 증진

북한행정 연구의 각 분야는 행정학 연구의 본령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학계가 북한행정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당연하다고 본다. 북한행정 연구는 한국 행정학계에 새로운 연구대상의 발견이 될 수 있고, 행정학의 발전적 전환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 행정학은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이래, ‘학문적 종속성’을 고민해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는 ‘토착화’, 2000년대 중반에는 ‘한국화’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한국(적) 행정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한국행정이 해결을 원하는 시대적 과제를 연구문제로 선정하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윤영진, 2013). 그렇다면,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북한행정 연구는 반드시 행정학의 시대적 과제의 하나가 돼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행정학은 ‘우리의’ 행정학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제적 연구교류 플랫폼 창설 및 운영

북한행정 연구의 한계에서 논의되었듯, 현재 남북한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정과 정책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이다. 연구자들의 기반학문적 기초, 인식, 개념 사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활발한 지적소통을 통한 연구교류는 학문발전의 필수적 기반이다. 이런 견지에서 북한 행정 연구교류를 위한 학제적 플랫폼의 창설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²⁰ 관련 학회간 공동 학술회의 개최 및 북한행정 주제 하에 학술모임 상설화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학제간 연구 성과가 적실성을 띠고 축적되고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업적 연구방식이 지속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행정학자들은 기존 북한연구나 타 학문에 기초하여 북한행정을 연구한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기반으로 북한체제의 특수성이라는 일종의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학 연구자들은 행정학이 축적해 온 이론적 토대에 기초하여 북한행정 연구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학문적 교류 활성화는 선순환적으로 북한행정 연구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줌으로써 북한행정 연구분야가 북한에 대한 학제적 연구체제에서 약한 고리로 남아 있는 현재의 상태를 크게 개선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

20_ 이런 점에서 한국행정학회가 2007년과 2011년 각각 발족시킨 북한사회·행정 연구회와 통일특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학제적 연구교류를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 단행본 〉

- 김광웅. 2004, 『비교행정론』 (서울: 박영사).
- 김성남. 2016, 『비교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종호. 2004, 『비교행정 강의』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중훈·조세현·김윤권·임성근·김경태·김성수·김시홍·김영우·박상철·오종진·이종원. 2018, 『비교정치행정-주요 국가의 국가운영 체제 및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 박영사).
- 박천오·하태권·문명재·권영주·고동주·조이현·김상묵·최영출·서성원·변혜옥·김근세·김종호. 2018, 『비교행정』 (서울: 법문사).
- 유종해·김택. 2011, 『비교행정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 임도빈. 2016, 『개발협력시대의 비교행정학-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행정 체제의 분석적 이해』 (서울: 박영사).
- 최진욱. 2002, 『현대북한행정론』 (서울: 명인문화사).

〈 논문 〉

- 강경화. 2020, “토픽모델링을 통한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 분석,” 『스마트 미디어저널』, 9(4): 44-51.
- 강응천. 2020,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현대북한연구』, 23(1): 39-74.
- 강채연. 2020,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동북아논총』, 25(2): 101-125.
- 고유환. 2015,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24(1): 29-54.

- 고현환. 2016, “북한의 경찰조직과 법제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74: 273-293.
-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 권혁희. 2019,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변화와 특성,” 『통일정책연구』, 28(1): 209-228.
- 기광서. 2011, “해방 후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1945~1948년),” 『평화연구』, 19(2): 333-366.
- 길병욱. 2007,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전략과 한국의 정책대응방안,” 『한국동북아논총』, 12(45): 5-34.
- 김갑식·이무철. 2006, “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22(3): 105-136.
- 김경수. 2004, “김정일시대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2): 87-123.
- 김경미·김안나. 2020,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 방향 분석,” 『미래교육학 연구』, 33(3): 1-24.
- 김관욱. 2013, “김정은시대 북한 대외정책 변화 연구: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4(3): 145-170.
- 김규범. 2019, “1956년 “8월전원회의 사건” 재론: 김일성의 인사정책과 ‘이이제이’식 용인술,” 『현대북한연구』, 22(3): 7-47.
- 김근세, 정용덕. 2002, “북한 국가관료제의 특성: 북한 국가행정기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책학회보』, 11(2): 195-226.
- 김근식. 2002,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349-366.
- 김노창·한영은. 2013,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4(6): 67-103.
- 김동엽. 2013,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2): 87-117.

- 김병기. 2020,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행정법연구』, 60: 79-113.
- 김보미. 2015, “테탕트 시대의 ‘냉각지대’: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한계 (1966~1976),” 『현대북한연구』, 18(2): 39-76.
- 김선호. 2019, “북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조직·간부구성,” 『군사』, 111: -45.
- 김영수. 2006, “북한 연구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52: 25-54.
- 김옥자. 2014, “만경대혁명학원 창립과 핵심인재양성에 관한 연구,” 『북한 연구학회보』, 18(1): 115-136.
- 김수연. 2020, “북한 간부양성체계의 변천 및 특징,” 『국가안보와 전략』, 20(3): 41-76.
- 김수현·박순성. 2022, “김정은 시기 북한 재정 연구: 최고인민회의의 국가 예산안 변화를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8(1): 187-215.
- 김인수. 2011, “김정일 집권기 북한군 장령 진급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 연구』, 26(4): 103-126.
- 김일수. 2008, “북한의 대미정책과 핵협상: 김정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3(3): 193-212.
- 김정완. 2008, “남북한의 정치적 예산순환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 과학학회보』 12(1): 95-114.
- 김종섭·장태옥·김시영·권오상. 1993, “행정학 교과서 분석을 통한 한국 행정학 연구의 추이 : 인용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3.
- 김종욱. 2008,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7(1): 371-400.
- 김지영. 2021, “북한 재정법제의 현황과 전망,” 『한양법학』, 32(4): 53-88.
- 김창희. 2010,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분석,” 『북한연구학 회보』, 14(2): 49-75.
- 김태구. 2019,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군부 위상 변화 연구,” 『통일과 평화』, 11(2): 143-178.

- 남성욱·오준철·채수란·이가영·배진. 2017, “북한의 화장품 정책과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 64개 기초 및 색조화장품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9(2): 1-48.
- 남성욱·황주희. 2018.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함의와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연구』, 27(1): 113-142.
- 명재진·이한태. 2015, “최근 북한정보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정보화정책』, 22(1): 3-27.
- 문장순. 2011, “북한 군(郡)의 역할 변화와 특징,” 『평화학연구』, 12(1): 107-125.
- 박광국·채경진. 2013, “행정문화와 조직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63-85.
- 박근재·김인수. 2013, “북한 군부 엘리트의 경력 이동 연결망 분석,” 『국방정책연구』, 29(2): 89-111.
- 박상익. 2009, “선군시대의 관료문화,” 『북한연구학회보』, 13(1): 1-33.
- _____. 2010, “북한의 헌법개정과 행정체제,” 『평화학연구』, 11(1): 147-170.
- 박상현. 2009, “북한 대외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고찰: 약소국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인지심리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8(1): 33-61.
- 박영자. 2005, “북한 중앙국가기관 특성과 체제운영 실태: ‘민주집중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동아연구』, 49: 231-273.
- _____. 2005,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 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9(5): 303-323.
- 박영정. 2019,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무형유산』, 7: 5-29.

- 박완신. 2003, “북한 관료의 역기능적 행태 분석-부패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8(1): 1-27.
- 박용수. 2002,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지역개발의 과제,” 『부동산학보』, 19: 130-138.
- 박유현. 2017, “북한의 민주개혁과 탈식민적 조세제도의 형성, 1945~1949,” 『현대북한연구』, 20(2): 192-228.
- 박응격. 2005, “남북한에서의 관료문화와 윤리,” 『한독사회과학논총』, 15(2): 267-283.
- 박정원. 2017,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53: 9-59.
- 박준호. 2018,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한 예산수입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2(1): 87-108.
- 박진우. 2010, “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6(3): 855-880.
- 박통희. 1996, “분야별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행정학(3); 한국행정학의 [조직론] 교과서에 대한 평론: 적실성 제고를 위한 요건을 중심으로,” 『韓國行政學報』, 30(4): 4189-4201.
- 박휘락. 2017, “북핵의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의 방정식 활용,” 『국방연구』, 60(4): 29-52.
- 배국열. 2010, “김정일시대 북한 경제엘리트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35(2): 75-101.
- 배영애. 2018,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통일과 평화』, 10(2): 193-240.
- 백성호. 2007,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유럽외교정책 연구-대내외 환경요인 (1998-2002) 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5(1): 99-125.
- 부형욱. 2011, “행정·정책이론과 북한, 통일, 안보문제-이론적 적용 가능성 모색,”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 서보혁. 2011, “월츠의 제3이미지와 북한의 대미정책,” 『북한연구학회보』, 15(2): 167-193.

- 성채기. 2006, “북한 공표군사비 실체에 대한 정밀 재분석,” 『국방정책연구』, 21(4): 105-136.
- 송용선. 2003, “북한 행정의 정치적 성격 연구,” 『윤리연구』, 52(1): 10-209.
- 송인호. 2016,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6(1): 215-235.
- 신윤창. 2015,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49: 75-100.
- 신정화. 2015,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대일정책: 김정일, 김정은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2): 131-150.
- 신현윤. 2007, “최근 북한 재정·금융법제의 변화와 입법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20(3): 551-579.
- 신혜선·유남원·신형덕. 2020, “김정은시대 북한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분석적 고찰: 문화 예술 행정체계와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4(3): 155-178.
- 신효숙. 2010,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평화학연구』, 11(3): 203-227.
- 안득기·허정필. 2013, “북한연구동향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1970년-2012년),” 『평화학연구』, 14(5): 143-162.
- 안지호·조충희·현주. 2018, “북한의 지방행정 두텁게 기술하기: 평안남도 ○○군의 공간분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3): 67-89.
- 양문수. 2014,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북한연구학회보』, 18(2): 59-94.
- 양옥승·신은미. 2016, “북한의 유아교육 정책 분석,” 『유아교육연구』, 36(2): 109-121.
- 양정훈. 2010, “사회주의의 변화(개혁)에 따른 관료주의와 부패 실태 고찰,”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3): 151-174.
- 양현모. 2008, “북한 중앙행정기관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8(1): 103-136.
- 엄현숙. 2019,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19(4): 77-111.

- 예대열. 2020, “해방 직후 북한의 재정·금융 상황과 임시 재정 대책,” 『사학연구』, 138: 305-350.
- 오재일·박정민. 2002, “남북행정구역의 변천과 발전방향,” 『행정논총』, 40(2): 29-62.
- 우평균. 2019, “북한 경제 특구 정책의 특성: 한계와 지향성,” 『평화학연구』, 20(4): 103-124.
- 유민봉. 1996, “한국의 「인사행정론」 교과서에 대한 평론 : 구조·내용의 진단과 대안모색,” 『한국행정학보』, 30(3): 3187-3197.
- 유현정·정일영. 2016,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북한학보』, 41(1): 5-37.
- 윤성만·김미옥·정형록·전용욱. 2020, “북한의 경영회계결산,” 『회계저널』, 29(3): 109-135.
- 윤영진. 2013, “행정학 연구경향의 분석과 과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0-2012) 게재 논문의 총괄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1-29.
- 윤인주. 2015,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19(1): 93-123.
- 윤정원. 2021,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구조에 대한 연구: 과학계량학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30(4): 173-202.
- 이가영. 2021,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김정은 시기 경제정책 연구-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7(2): 124-146.
- 이건웅·차성현. 2022,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초·중등 교육 특징 분석: 「인민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1): 21-38.
- 이계만. 2003, “북한 헌법상 국가기구체제의 구성원칙 및 특성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7(2): 5-32.
- _____. 2003,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구성형태 및 의결기관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195-210.

- 이기동. 2010, “북한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과 영향: 화폐개혁 조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1): 157-174.
- 이달희. 2006, “북한 공식 발표 국방비의 진실 게임,” 『국방정책연구』, 21(4): 137-168.
- 이대근. 2004,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 소련,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 『국방연구』, 47(2): 149-172.
- 이대용·이다솔·김춘순. 2022, “우리나라에서 북한 행정은 어떻게 연구 되고 있는가? -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2(2): 75-106.
- 이미경. 2015, “북한의 대일인식의 특징과 함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북한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0(2): 53-70.
- 이상숙. 2016, “국공내전 시기 북한의 중국공산당 지원에 대한 재검토: 경제사회적 원인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0(1): 209-231.
- 이상혁. 2020, “북한 언어정책의 비교·분석과 그 서술 변화에 대하여 - 『조선로동당정책사(언어부문)』(1973)과 『조선로동당언어정책사』(2005)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0: 95-124.
- 이성봉. 2020,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 특성: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76: 171-197.
- 이성춘. 2017, “북한체제의 군부 핵심요직 변화: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7(2): 39-58
- 이성훈. 2019, “지역 핵보유 국가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62(4): 299-334.
- 이승열. 2021, “북한의 ‘코로나(COVID)-19’ 대응실태 분석: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21(4): 123-153.
- 이승중·김대욱. 2011,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행정논총』, 49(2): 267-294.
- 이시형. 2006, “해방 후 북한체제 형성과정에서 김일성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당국가체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9(2): 251-272.

- 이영훈. 2000,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에 대한 이론정립을 위한 시론: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메카니즘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9(2): 147-172.
- _____. 2002, “이행기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가상현실 분석-최근 경제 개혁의 의미와 정책적 과제,” 『사회경제평론』, 19: 129-163.
- 이윤진. 2016,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한국 사회복지조사연구』, 50: 189-219.
- 이윤호·남재성·차훈진. 2006, “독일의 경찰통합 사례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 통합 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307-344.
- 이정철. 2003, “북한의 신농업정책:농업 국영화 논쟁과 토지정리사업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6(2): 61-89.
- 이철수. 2019,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인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4(1): 215-243.
- 이해정·강성현. 2020, “문헌으로 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 『국가전략』, 26(3): 151-179.
- 이형석. 2010, “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와 의미: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17(3): 143-168.
- 이혜영·최성락. 2014, “행정학의 연구 경향 분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1): 1-19.
- 이효원. 2010,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51(1): 67-104.
- 임도빈·안지호·현주. 2015, “북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연구: 지방인민 위원회와 협동 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4): 133-158.
- 임재형. 2001, “탈냉전기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요인과 대응전략: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1(4): 105-125.
- 전영선. 2007, “김정일 시대 통치스타일로서 ‘음악정치,’” 『현대북한연구』, 10(1): 51-85.

- 전현수. 2007, “해방 직후 북한의 국가예산(1945~1948),” 『韓國史學報』, 28: 179-207.
- 정길호. 2013, “행정학 중심의 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실적과 향후 연구 방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96-416.
- 정영화. 2008, “북한 국유기업개혁을 위한 재정법제 개선방안,” 『통일문제 연구』, 20(1): 145-192.
- 정은미. 2007, “북한농업정책의 이중궤도: 집단농업과 농민사경제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19(1): 247-275.
- 정은찬. 2022, “북한 협동농장 개혁에 대한 고찰: 협동농장 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아세아연구』, 65(2): 209-239.
- 정일영. 2018, “북한의 대(對)유럽정책: 전략과 김정은 시대의 함의,” 『아태 연구』, 25(2): 5-30.
- 정정현. 2018, “북한의 협동농장 생산체제에 있어 분조관리제의 변화와 농업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48: 53-74.
- 정준금. 2013, “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31-61.
- 정지용·이철수. 2016,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34(34): 155-194.
- 전현수·김형재. 2010, “북한의 대미 외교적 기동성에 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7(1): 253-279.
- 정형록·최연식·김미옥. 2020, “북한 재무회계의 개관 : 북한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회계와 정책연구』, 25(1): 53-89.
- 조동호. 2013, “경제·핵 병진노선의 의미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국가전략』, 19(4): 33-56.
- 조정아. 2014,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23(2): 177-206.
- 조창익. 2020,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남북한 협력의 방향 고찰,” 『여성경제연구』, 17(2): 59-80.

- 주상현. 2002,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39-55.
- 진희관. 2011,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연구-재중총련, 재CIS동포, 재일총련 그리고 재미동포 정책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3(1): 63-106.
- 진희관·윤인주. 20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 연구-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34(2): 41-70.
- 차승주. 20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덕교육,” 『초등도덕교육』, 65: 1-27.
- 채경희. 2017, “북한 인민반의 조직,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5): 809-819.
- 채원호·김옥일·손호중. 2006,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297-321.
- 채원호. 2013, “비교행정·국제행정 분야 국내 학술지 연구경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319-338.
- 최선·김재우. 2018,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국가안보와 전략』, 18(4): 61-190.
- 최연식·정형록·이지연·김미옥. 2017, “북한 회계학 교과서 분석을 통한 북한의 회계검증제도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연구』, 15(2): 157-179.
- 최영출, 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 최정욱. 2020, “북한 예산수입법제의 변화,” 『북한법연구』 24: 85-125.
- 최진욱. 1998, “개정헌법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전망,” 『통일정책연구』, 7(2): 41-64.
- 탁용달. 2010, “북한 국방위원회의 변화 과정과 경제적 역할-비교사회주의 방법을 통하여,” 『북한학연구』, 6(1): 173-196.
- 표윤신·허재영. 20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도 네트워크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5(3): 97-122.

- 하상식. 2004, “북한경제의 개혁전망-‘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9(32): 131-158.
- 하연섭. 1996, “한국의 「재무행정론」 교과서에 대한 평론: 새로운 접근을 위한 모색,” 『한국행정학보』, 30(2): 2163-2171.
- 한동훈. 2021,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에 대한 법체계,” 『법학논총』, 45(1): 161-191.
- 함성득·양다승. 2010, “북한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연구: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18(1): 119-154.
- 홍성국. 2009, “7·1조치 전후 북한 군사비 보정을 위한 시론적 고찰,” 『북한학보』, 34(2): 109-146.
- 홍성후. 2008, “마키아벨리 통치술로 본 북한의 핵개발정책분석,” 『한국동북아논총』, 13(46): 171-192.
- 홍순직. 2003,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통일문제연구』, 40: 171-197.
- 홍정기. 2021, “북한 기층조직인 인민반의 감시통제 요인 분석,” 『군사발전연구』, 15(1): 27-54.
- 황선훈. 2018,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8(2): 89-131.
- 황일도. 2013,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추출한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 『북한연구학회보』, 17(1): 117-145.
- 황주희·윤인주. 2022, “『로동신문』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수산사업소 정책 연구,” 『해양정책연구』, 37(1): 81-114.

< 홈페이지/언론 >

UN SDG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2022/09/08).

이제훈. 2022, “통일부, 남북회담 사료 일반에 첫 공개,” 『한겨레신문』, 5월 3일: 3.